



면죄부 위안부 판결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

관련 기사 11면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3면

시장경제의
비효율성 보여 주는
반도체 부족 사태

4~5면

체르노빌 참사 35년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6면

트랜스젠더
변환수 하사 죽음 한 달
차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

12면

코로나19 시기
이주민 체류와
취업 기회 보장하라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국가 개입 강화하는 바이든

8면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11면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김문성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사람에게 제기된 의혹의 본질은 권력을 이용한 농단 의혹이다. 검찰권 남용을 문제삼으며 ‘검찰 개혁’을 떠들어 왔지만, 현 정부의 검사들도 똑같았던 것이다.

이 둘의 행태는 공수처를 검찰 수사에 대한 피난처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성윤은 검찰이 기소를 해 버리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불발될 수 있다. 그런데 공수처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시간을 끌면 검찰총장이 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규원은 수원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맹비난하며 고위층 부패 수사 전담 기관으로 만든 곳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조국과 청와대 인사들을 향하고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는 해당 수사팀들을 해체 수준으로 인사 조치해 수사를 방해했다.

갈등 속에서 권력형 부패 수사가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핵심 의혹 대상인 임종석 등을 제대로 수사해 보지 못한 채, 최근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 이진석만 추가 기소하고 말았다.

이런 실체가 알려져, 최근에는 공수처가 고위층 부패를 적절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고, 정부의 위선에 대한 반감과 환멸만 가득하다. 4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배경이다. 급기야

청와대와 갈등을 벌인 윤석열이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은 공수처의 권한에 관한 법률 해석과 조율 과정에서 서로 권한을 더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역시나 공수처의 수사 이첩권이다. 정부와 공수처는 공수처가 언제든지 검찰·경찰에게서 고위층 관련 수사를 가져올 수 있고, 설사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소 유보부 이첩’). 검찰도 공수처에게 순순히 권한을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다. 지난해 검찰 전반이 정부의 위선적인 검찰인사(정권에 대한 수사 방해용 인사)에 반발해 이반한 여파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 방해용 ‘검찰 개혁’의 여파가 국가기관 내 갈등을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 또다시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전개될 수 있어 문재인의 레임덕 위기는 심화되고 국가기관 내, 공식정치 내 쟁투는 격화될 것이다.



성 접대와 공문서 위조

문재인 정부에서 김학의 건이 제기된 과정 자체가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김학의 등 고위 권력자들에게 성적 향응(성접대)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박근혜가 김학의를 법무부차관에 임명하면서 의혹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당시 성접대에 이용된 여성들은 자신들이 뇌물이 아니라며 윤중천과 김학의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김학의만 망신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덮히는 듯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만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내부 자료들을 보면, 진상조사단에서 아주 썩은 내가 난다.

박 변호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위원을 하다가 김학의 건 처리 결정 과정에서 위원직을 사퇴했었다. 박 변호사는 이 자료를 SBS와 <한국일보>에 제공했는데, 두 언론이 민주당-

국민의힘 간 진영논리와 상대적 거리를 뒤 온 것을 고려한 듯하다.

두 언론의 보도들을 종합하면, 진상조사단은 윤중천 면담 결과를 왜곡·과장한 뒤 이를 근거로 김학의를 성접대(뇌물수수)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그 직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이규원과 함께 기소됨)에게 위조된 공문서로 김학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변장한 채 공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를 붙잡았다.

당시는 버닝썬 사건이 문재인 정부와 연결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있는 때였다.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 간 부들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정부가 그것을 맞받아치려고 김학의 건을 재점화했던 것이다.

검찰이 박근혜 시절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 의혹이 짙고, 김학의가 변호할 가치 없는 인물인데다가 그 혐의도 만인의 공분을 살 만함을 이용했던 것이다.

김학의 성접대 건에 대한 조사 왜곡과 불법 출국금지, 두 건에서 모두 등장하는 인물은 검사 이규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광철이다. 검사 이규원은 매번 이광철과 통화하고 상

의했다. 이광철은 김학의 출금 당시 추미에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이규원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이 부실 보고서는 반년 후 <한겨레>를 통해 윤석열이 윤중천의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로 이어졌다. 조국가족 비리 수사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이 한창 갈등할 때였다. 나중에 <한겨레>는 장문의 정정보도를 해야 했다.

결국 떼뗄수 없었던 두 국가기관 사이의 갈등 심화 속에서 문재인이 요란하게 추진한 ‘검찰 개혁’의 추악한 속내만 드러나고 있다.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김지태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2019년보다 줄기는커녕 되레 2.1퍼센트(42명)나 늘었다.

2018년부터 산재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2000명을 넘겼다. 해재자 수도 10만 8379명이나 됐다.

많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을 유형 순으로 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파열, 물체에 맞음 등이다. 충분한 안전 투자, 인력 확보와 조건 개선 등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그런데도 짭짤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교통 속에서 매일 대여섯 명이 죽어 나갔다.

이조차 규모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 산재 은폐가 광범하게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사업장과 교통사고, 체육행사,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된 것이라 매년 2000명대의 사망자수가 숨어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에 산재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행동은 거꾸로 했다. 누더기가 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 불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제2의 김용균을 막지 못했다. 법 개정 이후 발전소 5곳에서 산재가 70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1월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에서

처벌 수준과 범위를 대폭 낮춘 누더기였다. 그레 놓고도 정부는 최근 사용자들이 더한층 후퇴를 요구한 데 맞장구를 치고 있다.(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제재, 호응하는 정부’를 보시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3년 뒤로 미뤘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포함)에서 714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해 전체 사고 사망자 중에서 80.9퍼센트나 차지했는데 말이다.

비판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는 사망자를 15퍼센트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3월 25일 내놓은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도 기업의 “자율관리” 정착, 사고 예방 지원 등에 그쳤다. 위험한 화학사업장은 “맞춤형 중점관리”를 하겠지만, 정작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해 안전을 위협한 것은 정부 자신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에 증가한 배달노동자들의 사고 사망도 예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신청 건수와 사고 사망자수가 2배 늘었지만,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인 재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조차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일하다 다치고 죽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노동자 착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무한 이윤 경쟁에서 살아남으

려고 노동자들이 더 오래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체제 지키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도 노동자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시한다.

가령, 지난해 건설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화재 참사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한 사례다. (관련 기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당시 기업주는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으로 몰았다. 정부는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려 공사가 진행되도록 용인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탐욕에 맞서야 한다.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장호중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집단면역이 정말로 생긴다면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국내 백신 공급은 터무니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대감은 좌절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나빠지는 여론에 전전긍긍하면서도, 몇 달째 고장 난 녹음기처럼 '백신 공급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백신 공급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계획 자체가 너무 안일했던 데다가 그것조차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제약사와의 계약을 핑계로 백신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백신 공급 실패

하나씩 따져보자. 정부는 “백신 7600만~7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말을 석 달째 반복해 왔다. 문재인이 노바백스 사장과 직접 통화했다던 1월 20일부터다. 그전까지는 5600만 명분을 확보했으니 문제없다며 큰소리 치다가 코백스 등에서 받기로 한 백신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듯하자 부랴부랴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확보'했다는 물량의 절반 이상은 구두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2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노바백스 백신은 계약은커녕 아직 사용 승인도 나지 않았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고 있는 미국 정부는 후발 제약사 백신의 사용 승인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 미국 정부가 백신 재료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서, 사용 승인이 나도 국내에서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도 미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다. 문재인이 모더나 사장과 통화해서 올해 2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4월 20일 부총리 홍남기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분기에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600만 명분을 차지하는 얀센 백신은 회귀 혈전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서도 접종이 일시 중단됐다. 접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도 백신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4600만 명분을 제외하고 실제 계약이 된 것은 3300만 명분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그것의

10퍼센트도 안 된다.

100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한 코백스에서 두 달 동안 실제 들어온 물량은 3퍼센트도 안 된다. 코백스에 가장 많은 백신을 공급하는 인도의 세럼 인스티튜트도 자국 내 사용을 우선해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코백스를 통한 백신 수급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불투명

화이자 백신 1300만 명분은 1~2주간격으로 25만 개(12만 5000명분)씩 찢끔찢끔 들어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속도대로라면 백신 접종에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계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홍익표는 화이자 측이 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해 와 계약을 미뤘다고 밝혔다. '무리한 요구'가 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말이다.

결국, 홍남기는 11월까지 3600만 회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에 도달하겠다고 했는데, '11월'은 기존 목표고 '3600만 회'는 달라진 목표다. 방역담당자들이 "9월까지 3600만 명 접종"으로 수정했지만, 홍남기의 단순한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정부는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채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필자가 본지 364호에 쓴 기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을 너무 과장하는 유럽연합 등을 비판하느라 이런 맥락을 충분히 지적하지 못했다.)

정부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니라 유리한 일부 사실만 발표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돌봄종사자들과 비행기 승무원들의 경우 백신 접종 동의율이 58.6퍼센트까지 낮아졌다.

“왜 안동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도 확보를 못 하나”(심상정 정의당 의원) 하는 지적에 부총리 홍남기는 고장 난 녹음기처럼 “11월 집단면역”만 되뇌었다. 같은 공장에서 시제품까지 만들어 봤다는 노바백스의 백신은 스스로 검증하지도 않고 미국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협정을 따르느라 국내 제약사들은 알엔에이 백신 제조 방법을 처음부터 새로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 나간 일이 또 있을까?

이 정부가 기업주들의 이윤을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보다 앞세우는 한, 팬데믹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늘어나는데 백신 공급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지배자들은 여전히 팬데믹을 악화시키고 있다

백신과 변이 사이의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일부 나라들에서 실낱같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세계 상황은 악화일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두 달째 늘고 있다.

4월 15일 하루 확진자 수는 90만 명을 넘겨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4월보다 더 늘었다. 사망자도 계속 늘어 지금까지 300만 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이에 영국·남아공 변이에 이어 브라질·인도 변이까지 생겼다.

이스라엘 정부는 4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집단면역을 시험해 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국민 900만 명 중 60퍼센트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로 집단면역에 도달했다면 앞으로 소수의 감염자가 생길 수는 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4월 20일 현재 이스라엘의 하루 확진자 수는 58명인데,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웃돌던 3개월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화이자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남아공 변이가 많이 퍼지지 않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중단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화이자는 이미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화이자 측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조기에 백신을 대량 공급받을 수 있었

다고 하는데, 변이에 대비한 추가 백신 공급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면역력을 갖게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면역력이 생긴 사람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각종 비필수 부문의 영업을 재개했고 조만간 대규모 공연 등을 통해 집단면역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드는 수준이지만 3개월 전에 7만 명에 이르던 것과 견주면 상당히 호전된 셈이다.

그러나 최근 인도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중변이'(B.1.617) 감염이 영국에서도 확인되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중변이

현재 인도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매일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인구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라 집단면역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하루 확진자 수가 25만 명을 넘기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루 사망자 수도 2000명이 넘는다.

올해 3월 초에 시작된 인도의 2차 확산에서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45세 미만의 젊은층이고, 이전의 감염 증상과는 확연히 다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었다. 특히 12세 미만 아동 중에도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변화가 이중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한 주 전만 해도 하루 사망자 수

가 4000명을 넘긴 브라질에서는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다. 하지만 보우소나루가 이끄는 우익 정부가 야기한 혼란 탓에 언제 다시 확진자가 늘어도 이상할 게 없다. 일부 도시에서는 전체 인구의 70퍼센트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브라질 변이(P.1)가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알아보고 있다.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를 종횡무진하는 반면, 백신 접종은 뒤에 쫓겨나고 있다. 백신 공급을 늘리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매달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들 일부조차 팬데믹 종식을 위해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거대 제약사들은 들은 체만 채 한다. 이 때문에 백신 생산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 정부들의 백신 독점으로 빈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이 발생 가능성을 높여 다시 선진국도 위협하게 될 테지만, 선진국 지배자들은 추가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버틸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백신만으로는 팬데믹을 끝낼 수 없다. 획기적 조치가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인간 사이를 옮겨 다니며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등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국경 통제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해에 경험한 바 있다.

자본주의는 코로나19를 낳고 키웠으며 이제 그 퇴치도 가로막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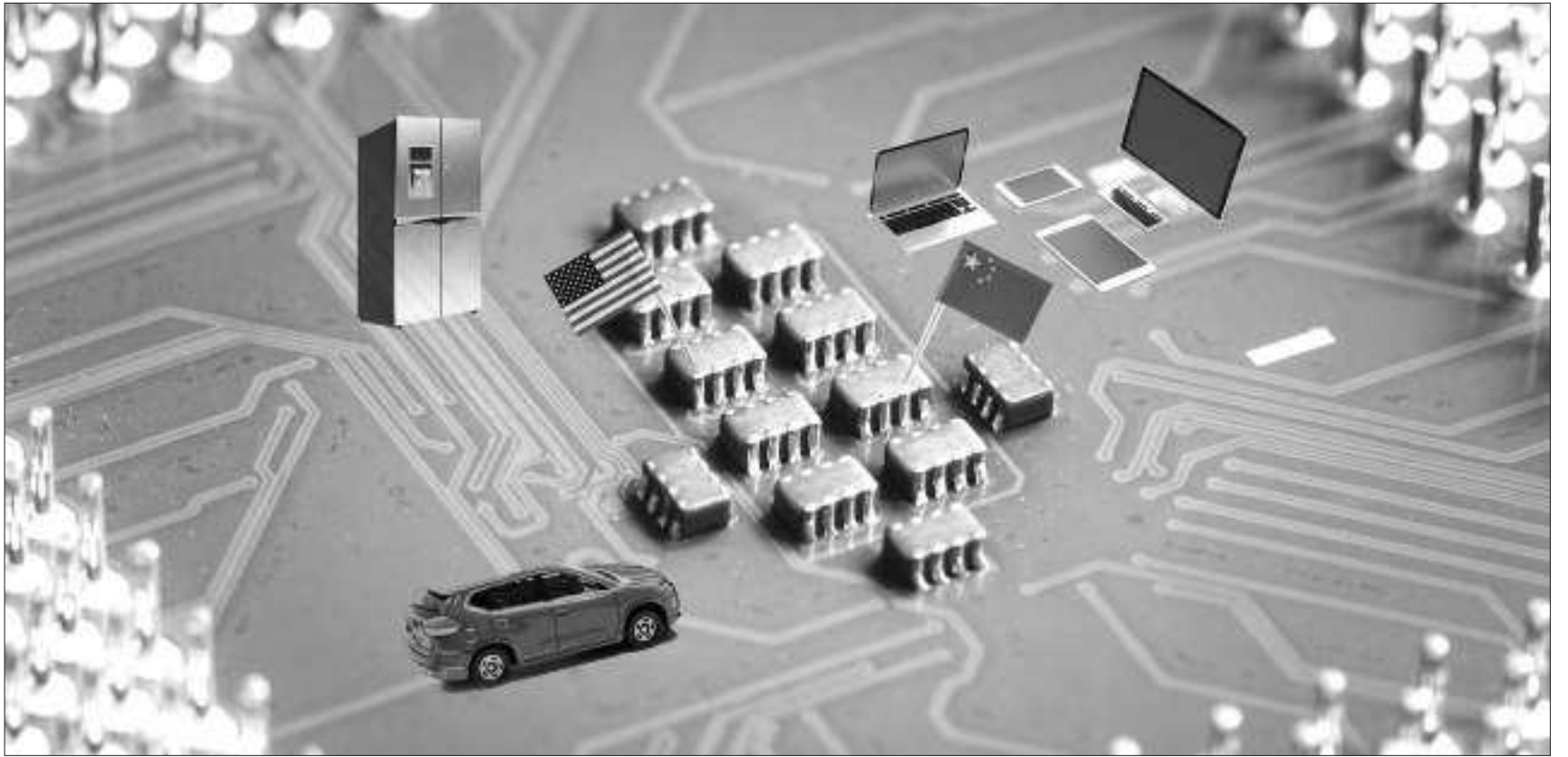
시장경제의 비효율성 보여 주는 반도체 부족 사태

강동훈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지엠, 포드,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감산에 들어갔다. 개당 1~2달러 하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130만 대 감소했다고 한다. 또,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매출이 606억 달러(약 68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반도체 재고를 비교적 많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현대자동차도 감산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차 울산1공장은 4월 7일부터 일주일간 가동을 중단했고,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도 12~13일에 이어 19~20일에 또다시 가동을 중단했다. 부평 2공장 가동률을 50퍼센트로 유지하던 한국지엠도 19일부터 일주일간 부평 1, 2공장 전체를 정지한다. 갈수록 감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동차 기업들은 반도체 주문을 줄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요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기업들이 부랴부랴 다시 반도체를 주문했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수



반도체 부족 사태는 자동차에 이어 가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요가 늘어난 컴퓨터·휴대폰·가전용 반도체 생산을 늘린 상황이어서 차량용 반도체를 더 생산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차량용 반도체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저수익 사업이다 보니 반도체 기업들이 애써 생산을 늘릴 유인도 적다.

여기에 2월에는 분명 기후 변화와 관련 있는 북극발(發) 이상한파가 들이닥쳐 미국 텍사스의 NXP, 인피니온, 삼성전자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대만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 공장들의 가동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3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일본 르네사스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설비 일부가 피해를 입으며 최소 올해 2분기까지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자동차 업계는 물론 가전 업계와 컴퓨터·스마트폰 등 IT 업계로도 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 1달러에 판매되던 특정 반도체는 32달러까지 치솟아, 의료기기, CCTV, 소형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애플·삼성전자·LG전자·월플·휴렛팩커드·샤오미 같은 가전·IT 대기업들도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을 축소하거나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자유 시장 경쟁

이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의 위탁생산 전문 업체인 폭스콘의 회장 류양웨이(劉揚偉)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2022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2021년이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더 근본에서는 ‘자유 시장’이 야말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최상의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환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한 사례이다.

흔히 주류 경제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 ▶5면으로 이어짐

반도체 부족 심화시키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4월 12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지엠, 글로벌 파운드리, TSMC, 삼성전자 등 기업 19곳의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기업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24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미국의 공급망’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배터리 등 4개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동안 우선 점검하고, 국방·공중보건·IT·에너지·운송·농산물 공급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검토한 뒤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의 기세를 그대로 놔둘 경우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물론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매출의 48퍼센트를 차지한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의 반도체 생

산 점유율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1990년 37퍼센트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한국·대만 등 아시아 지역 공장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70퍼센트에 이르고, 이 중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은 15퍼센트 정도로 성장했다.

한편, 중국은 중국대로 첨단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기술에서는 여전히 1~2세대 뒤쳐져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이다. 2019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그래서 ‘중국제조2025’ 정책을 발표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핵심 산업의 국산화를 2025년까지 7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반도체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성장세를 꺾어야 중국이 패권 도전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거대 IT 기업 화웨이를 제재해 이를 고사시키려고 하

는 미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런 의지를 잘 알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만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독일 총리 메르켈은 “27개 유럽 기업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36억 유로를 투자”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제품의 20퍼센트를 유럽연합(EU)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경쟁의 심화와 자국으로의 공급망 확보 전략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재고 확보 경쟁 심화

반도체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TSMC 마크 리우 회장은 “반도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공급 부족을 우려한 기업들의 사재기”라며 “반도체 수요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과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기업과 정부는 미·중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어느 한편을 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물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어느 한편을 선택했을 때 오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둘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로서는 반도체 수출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른 자본의 분산과 집적·집중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IDM)로 출발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각 분야에서 경쟁이 격화하고 초기 투자 비중이 급증하면서 생산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설계기업(팹리스)과 설계는 하지 않고 외주 제작만 도맡는 위탁제조기업(파운드리)으로 나뉘어

발전해 왔다. 브로드컴·퀄컴·엔비디아 등이 반도체 설계 부문을 지배하는 기업이 됐고, 생산 공정에서의 기술 개발에 힘쓴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위탁제조를 좌우하는 거대 기업이 됐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 설비와 재료를 공급하는 미국·유럽·일본의 기업들이 성장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 내 여러 분야로의 자본의 분산과 각 분야 내에서의 거대 자본의 등장은 자본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한 파산·인수합병과 각 기업 간의 협력(설계와 생산 간, 생산과 설비 제조 간)이 어우러진 과정이었다.

따라서 주요국 정부들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 자국 내로 반도체 공급망을 모두 확보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격화하는 세계 패권 경쟁은 산업 생산지의 변경 과정을 더욱 촉진할 듯하다. 그리고 이런 경쟁 압박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반도체 부족 사태가 훗날 보여 줬듯이 말이다.



반도체 부족으로 멈춰 선 현대차 아산공장

▶ 4면에서 이어짐

장한다. 그리고 재화의 가격이 자본가들에게 무엇을 생산할지 알려 주는 신호 구실을 해서 최상의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런 신자유주의 교리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주류 정치가와 언론들이 늘어놓는 대안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규제를 풀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공급과 수요를, 생산과 소비를 결코 순조롭게 연결할 수 없다. 생산은 항상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은 생산이 완성될 쯤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해 주는 게 아니라,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원했던 바를 나타낼 뿐이다.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도 드러나듯이 제조업 생산은 최종 소비를 불과 두어 달 앞두고 시작되는 게 아니다. 반도체 생산의 증대도 수년에 걸쳐 고정자본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치하는 일에 좌우된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은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수개월간 미세공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이어져야 하고, 어떤 이유론 한 번 공장이 멈추면 앞뒤로 수개월간의 공정이 쓸모 없어지는 산업이다.

따라서 생산 계획에 관한 조율이 필수이지만 '자유 시장'에서는 경쟁 기업들 사이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물론 개별 기업들은 생산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부품이 1만 개 넘게 들어가는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관리'에 사활을 건다. 일본 자동차 기업도 요타에서 시작된 '적시생산' 방식은 부품 공급의 효율을 높이고 재고를 대폭 줄여 수익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계획은 흔히 다른 기업들의 경쟁적 계획 때문에 틀어지고 무산되기 일쑤다. 예컨대, 자

동차 회사들과 가전·IT 기업들은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을 늘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생산을 확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비롯하는 비효율성은 최근의 백신 공급 부족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본 제약회사들과 주요 국가들은 백신 개발에 나서지 않았었다. 팬데믹이 벌어지자 거대 제약회사들은 신속하게 백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개발 계획은 전혀 조율되지 않았고, 백신 생산을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혼란스러웠다. 변이 발생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은 가능한 빨리 전 인류에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돼 왔지만, 이윤을 위한 제약회사들과 각국 정부의 백신 경쟁 때문에 팬데믹 대처는 실패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은 풍토병이 될 공산이 매우 커진 것이다.

사실 계속되는 장기 침체야말로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생산할 수단과 일할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능력들은 낭비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 현재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개편하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계획과 생산 조율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과 정부들은 인류에게 닥칠 재앙보다 당장의 이윤을 더 신경 쓰고 있다.

게다가 지배자들은 자본주의의 이런 구조적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미 자동차 기업들은 감산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재정 지출이 증대하자, 복지와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김지윤

문재인 정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진단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첫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이름과 일부 내용을 약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진단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분류해 재정 지원의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18곳을 진단평가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 개별 통보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2유형이 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되고, 기존에 참여하던 재정지원사업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지원과 등록금 마련에 유의하라고 할 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 지원을 차별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려 한다. 가뜰이나 대학 입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따르겠다고 하면 하위 등급 대학에 대한 퇴출 압박은 강화될 것이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입 의존율은 50~60퍼센트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 2주기 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던 동부산대와 군산의 서해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폐교됐다.

퇴출 대상이 아닌 대학들 사이에서도 경쟁 압박이 커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실제로 올해 부산 신라대는 신입생 정원의 15퍼센트를 축소하고, 예술계열 학과들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신라대는 재정난을 이유

로 청소년노동자 50여 명을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내쫓기도 했다.

서열이 낮은 대학들에는 노동계급의 자녀들이 다닐 확률이 높는데, 정부가 하위등급 대학 퇴출을 유도하는 것은 계급 불평등을 키우고 노동계급의 구성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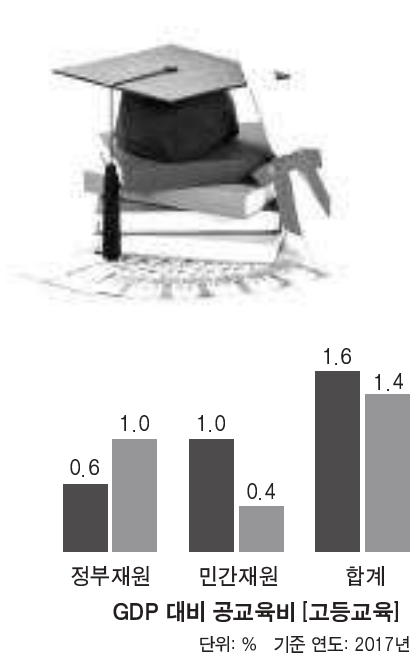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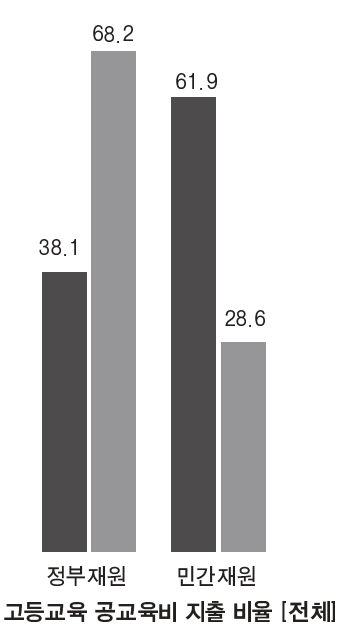
폐교는 아무 잘못이 없는 학생들에게 명예와 고통을 전가한다. 2017년 폐교된 한중대와 대구외대의 재적생 1493명이 갈 곳 없이 뿔뿔이 흩어졌다. 2012년 이후 재단 비리로 폐교된 명신대·성화대·벽성대의 재적 학생 중 44퍼센트만이 다른 대학에 특별편입학했다(민주당 김태연 의원실, 2014년). 학생들은 폐교 대학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힐 뿐 아니라, 각종 증명서조차 떼기 어려운 처지다.

폐교 대학의 교직원들도 아무 대책

도 없이 해고로 내몰렸다. 2018년 폐교된 서남대의 경우 151명이 직장을 잃었다. 교원들 중 전공에 맞는 학과로 이직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주용기 교수, 2018년) 인근 대학과 통폐합해 고용을 보장하거나 국립대로 교직원 고용을 승계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정부가 고등교육을 무계획적으로 시장에 맡겨서 생겨난 문제들의 책임을 대학 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대학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폐교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한국 ■ OECD평균



학령인구 감소 탓인가?

그간 정부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 구조조정을 정당화해 왔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대학 정원은 16만 명 넘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구조조정이 큰 반발을 사 온 점을 의식해 평가 기준과 표현 등을 약간 바꿨지만, 하위권 대학들을 퇴출시킨다는 기본 방향은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에 문제로 여겨지는 데에는 그간 정부가 대학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내맡겨 온 탓이 크다. 수요자 부담 원칙의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한국의 사립대 비율은 80퍼센트에 육박하고, 재정을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지방의 열악한 대학들에게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난으로 직결돼 존폐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지원은 아주 형편없다. 'OECD 교육지표 2020'(2017년 기준)를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대비 0.6퍼센트 수준이다(OECD 평균 1퍼센트).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퍼센트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61.9퍼센트)의 절반밖에 안 된다(그래프 참조). 게다가 얼마 안 되는 정부의 재정 지원조차 상위권 대학에 집중돼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중 34.9퍼센트가 상위 10개 대학으로 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에는 대학 구조조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신입생 총원, 재정 관리가 어려운 '한계대학'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학들은 폐교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육개발원(국무총리 산하)에 따르면 현재 한계대학은 84곳이고, 그중 전임 정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학교가 다수다.

정부는 산업 변화에 따라 대학 정원

과 시스템을 바꾸겠다고(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고도 한다. 이것은 대학 교육도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10년간 공대 정원은 1만 명가량, 의약계열은 2배 정도 늘었다. 반면에 인문·사회계열 입학 정원은 1만 명가량 줄어들고, 학과 통폐합이 이어져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고통을 겪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수익성을 우선한 고등교육 정책은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내용도 협소하게 만든다. 교육은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발달을 위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제공돼야 한다. 열악한 대학들에 정부의 지원은 줄이는 게 아니라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과 사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체르노빌 참사 35년 —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마이클 더글러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가운데, 어느덧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35년이 됐다. 이 참사가 보여 준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 본다. 다음은 2019년 8월 호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월간지 《솔리대리티》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당시 그 참사를 다뤄 회제가 된 드 라마 《체르노빌》에 관한 내용은 생략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반응로 한기가 폭발했다. 히로시마 핵폭탄의 400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됐다.

정부 당국은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못했고,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소방관들과 도움을 주려고 몰려온 수많은 자원 봉사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체르노빌 피해 규모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 소련 당국은 재해 규모를 은폐하려 했고, 그 결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 케이트 브라운은 저서 《생존 매뉴얼》을 집필하기 위해 4년간 수많은 연구와 기록 보존소의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는 사망자 수를 3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추정한다. 체르노빌 참사 이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암, 호흡기 질환, 빈혈, 자가면역 질환, 선천적 기형, 불임 문제가 사고 발생 전보다 2~3배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만이 그 재앙으로 배우자를 잃은 3만 5000명에게 지금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앙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은 대부분 벨라루스를 강타했다. 현재 벨라루스 농지의 20퍼센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멀리 떨어진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까지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다. 영국에서는 체르노빌의 방사능 물질이 섞인 비가 내린 후 9000곳에 달하는 농장에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마지막 제한 조치는 26년 뒤에야 해제됐다.

소련 정부는 어떤 경고도 발표하지 않았다. 폭발 이틀 후 스웨덴 당국이 방사능 증기를 감지하고 나서야 전 세계가 이 재앙을 알게 됐다.

스탈린주의 러시아

체르노빌 참사와 소련의 은폐 시도는 소련의 몰락을 앞당긴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소련은 1917년 진정한 노동자 혁명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1920년대에 이오시프 스탈린은 반혁명을 이끌어 노동계급 조직과 저항을 분쇄해 소련을 독재 국가로 만들고, 서방과 경쟁하기 위해 강제 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소련의 모든 산업을 국가가 소유했고, 노동자들은 이 국가를 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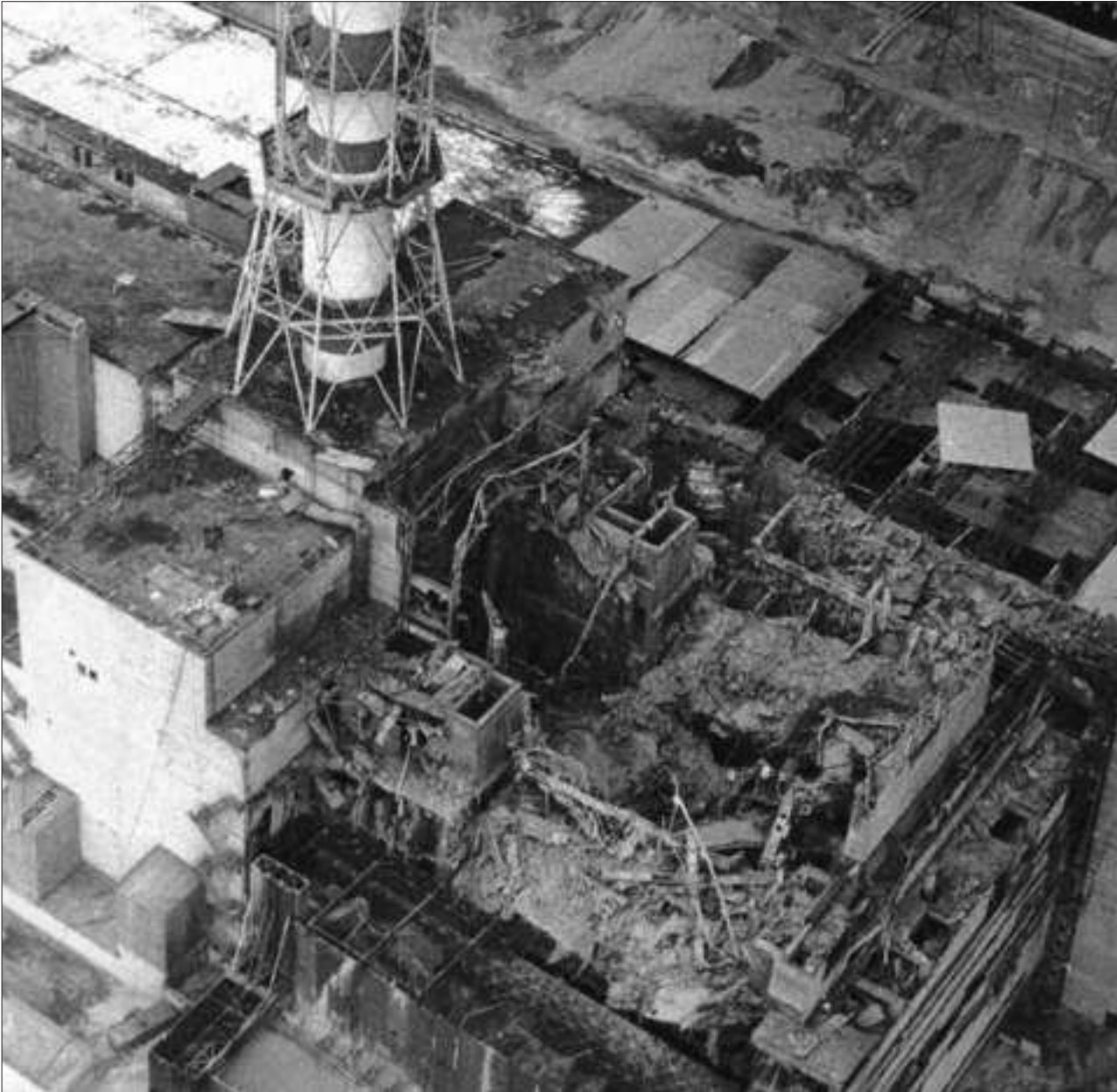


사진 출처 IAEA

세계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 체르노빌 참사는 안전한 핵발전은 없음을 보여 줬다

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 체제는 새로운 지배계급에 의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자비한 노동자 착취를 통해 이뤄지는 자본 축적에 의존했다. 체르노빌 참사 당시 이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수십 년 간의 침체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다.

프랑스 자유주의 이론가 알렉시드 토크빌은, 나쁜 정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개혁을 시작할 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소련 지배계급은 향후 방향을 놓고 분열했다. 1985년에 집권한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를 시장에 개방하고 세계 경제로 통합시키길 원했던 지배계급의 일부를 대표했다. 이런 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내 고르바초프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지배계급의 더 보수적인 일부와 권력 투쟁에 휘말렸다.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고르바초프는 정치적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글라스노스트”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더 많은 변화에 대한 갈망을 키웠다.

체르노빌 참사는 이 과정을 가속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련 체제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그 체제가 서구보다 기술이 더 낫다는 주장도 신뢰를 잃었다. 1989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광원 파업이 러시아를 휩쓸었다. [동유럽에서] 혁명들이 일어나 곧 소련 자체를 붕괴시켰다.

위험

체르노빌은 세계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였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1979년에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핵발전소에서 기계 고장으로 반응로 하나가 부분적으로 녹아내렸다.

영국에서는 2001~2008년 사이 핵발전소에서 1767건의 방사성 물질 누출, 고장 또는 기타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프랑스 정부는 모든 핵 사고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공표되는 사고가 연간 최대 800건에 달했다. 2009년에는 폭염으로 강이 냉각수 구실을 못할 정도로 데워져서 프랑스 핵발전소의 3분의 1이 폐쇄됐다. 기후 변화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핵 안전성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11년 일본은 노심용융(멜트다운)에 직면했다.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됐다.

당시 일본 총리 간 나오토는 최악의 경우 도쿄에서 3000만 명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와 오나가와 핵발전소 모두 방사성 물질 누출, 반응로 손상 사고가 일어나 이를 은폐한 역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 두 발전소의 운영을 허용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 이후 많은 발전소가 폐쇄된 후에도 여전히 핵발전 의존도를 높이려 한다.

이런 상황은 세계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도는 2031년까지 핵반응로 21기의 건설을 발주했고, 그중 상당수는 이미 건설 중이다. 중국은 핵반응로

45기[2021년 현재 49기]를 가동 중이고 15기를 더 건설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동안 매년 2기를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탈핵’을 했다는] 호주에서도 보수 연립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시 핵발전을 촉구하고 있고, 또 다른 공식 조사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 위원회의 주목적은 더 많은 우라늄 채굴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우라늄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2019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대법원은 [환경보호 단체들이 제기한] 일리리 우라늄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청정 에너지?

이 광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핵 산업은 친환경적인 것으로 포장된다. 핵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탄소 중립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즉,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기후 변화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다. 반응로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은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추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채굴, 운송,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 가스가 생긴다.

2004년 ‘지구의 친구들’이 낸 보고서는 핵반응로 건설, 우라늄 채굴·수송, 핵연료의 처리와 추가 수송, 방사성 폐기물 장기 보관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핵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풍력 발전보다 약 50퍼센트 더 많았다.”

호주 남부의 애들레이드시(市) 북쪽의 룩스비타운스 인근에 있는 올림픽댐광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우라늄 광산이다. 이 광산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주(州) 전력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이 광산은 또한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주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킨 끔찍한 역사가 있다.

게다가 세계 에너지 발전을 화석 연료 기술에서 핵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만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 핵발전소 하나를 짓는 데 15년이 걸린다.

핵발전은 기후 변화의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일부다.

핵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자리, 생활 수준과 기후 변화 대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식이 돼선 안 된다. 2018년 말 스페인 광산 노조는 2억 5000만 유로 규모의 협약을 따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의 거의 모든 탄광을 폐쇄하면서도 정당한 전환의 일환으로 관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훈련을 받게 됐다.

핵반응로에서 생기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고려하면 핵 산업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알파하기 그지 없다. 이 폐기물은 수십만 년 동안 치명적인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 영국의 핵 폐기물 보관을 담당하는 기관은 폐기물을 지하 1킬로미터에 매장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고문들조차 폐기물 저장 용기가 500년 이내에 녹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업저버〉신문은 “영국의 유해 핵 폐기물 비축량의 거의 90퍼센트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지 않아 언제라도 폭발하거나 누출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폐기물만으로도 산을 채우고도 남아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보다 더 나쁜 측면이 있다.

“민간” 핵발전 프로그램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시작됐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셀라필드 핵발전소가 가동됐을 때 그것의 주목적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초기 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핵무기를 생산한 10개국 중 8개국이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북한도 핵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플루토늄을 축적했다.

체르노빌 참사로 우리는 유럽을 거의 잃을 뻔했다. 재앙이 일어나면 누가,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지가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 참사였다. 이 참사는 스탈린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준다. 또, 안전한 핵발전과 안전한 폐기물 보관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핵발전은 기후 변화의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 준다.

번역 최병현

고조되는 미얀마 군부 폭력

‘국제 사회’ 인정 추구는 저항에 해악적일 것

김준호

미얀마 군부의 폭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군대는 거리 시위 거점과 주택단지뿐 아니라 시위대가 은신처로 삼는 병원·사찰을 매일같이 습격하고 있다. 양곤에서 파업 중인 간호사 한 명은 외신에 이렇게 전했다. “거리는 ‘킬링필드’를 방불케 합니다. 군인들이 주택가에서 총을 난사해 다섯 살배기 아이들도 죽었어요. 시위 참가자를 산 채로 불태우는 것도 봤습니다.” 4월 20일 현재 최소 738명이 사망했다.

지난주 명절 연휴 동안 군부는 시위 조직자들을 체포 1순위로 삼고 습격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핵심 인물들에게는 현상금이 걸렸다.

군부는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저항의 중심지인 양곤·만달레이 등 대도시에서 운동을 파괴하려 한다.(군부 수반 민 아웅 흘라잉이 4월 24일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상황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시위대가 교차로에 쌓은 거점 바리케이드를 RPG 유탄발사기로 폭파하고 그 자리에 검문소를 세우고, 중상자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을 표적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운동은 저항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대도시에서 청년·학생들은 군경의 무차별 폭력에 대응해 (대개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탄) 게릴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야음을 틈탄 추모 행진이나 장례식도 저항의 수단이 된다.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등 학생들도 동맹 휴업에 나섰다.

보건·은행·운송 부문에서 계속되는 무기한 파업도 여전히 미얀마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 양곤에서 파업 중인 은행 노동자 한 명은 외신에 이렇게 전했다. “은행 노동자 4분의 3 이상이 파업 중이라, 송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만·트럭·물류는 사실상 정지 상태입니다. 군대는 철도를 가동하려 하지만 기관사 파업 때문에 기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는 파업을 공격하고 있다. 탄압으로 파업 노동자들이 모임을 갖거나 시위를 벌이기 어려운데다 파업 지원 조직들이 군경의 집중 공격을 받는 탓에, 노동자 파업이 군부의 핵심 기반인 석유·가스·보석 채굴 등으



사진 출처 Myanmar Today



사진 출처 Myanmar Now

만달레이에서 시위대를 죽이고 시체를 가져가는 경찰들(위), 이런 잔혹한 탄압에도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군경의 공격을 피해 오토바이를 몰고 게릴라 시위를 벌이는 만달레이 노동자들(아래)

로는 충분히 번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핵심 부문의 투쟁을 지키기 위해 일부 지방 중소 도시들에서는 무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만달레이 북쪽의 사가잉주, 수도 네피도 서쪽의 마궤주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도시로 가는 군경 병력을 붙잡아 두려고 군 수송대와 지방 경찰서를 습격했다. 몇몇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이 군부대를 일시 점령해,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은 경보병 부대 일부가 국경 지대로 급파되기도 했다.

이런 전투에서 나오는 사망자는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군부가 시신과 중상자를 가리지 않고 부대로 싣고 가 암매장하기 때문이다. 바고시(市)

시민 무장대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시체의 산을 쌓고 있습니다. 시신 무더기에서 아직 비명이 들릴 때도 있어요.

“저희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끝나서는 안 돼요.

“내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저희는 이미 내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라?

상황이 점차 첨예해지는 지금, 민주주의 운운하던 강대국들(특히 미국)은 미얀마가 NLD와 군부가 동거하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듯하다.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이 미얀마가 “민주주의로 속히 돌아가야”(강조는 인용자) 한다고 촉구한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군부와 동거하던 기존의 허울뿐인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비록 군부의 쿠데타가 완성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긴 해도) 군경의 진압으로 가족·친지·동료를 잃은 평범한 미얀마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아웅산 수치의 정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전략과도 맞닿는 데가 있다.

역사적으로 NLD는 군부와 오랫동안 경쟁해 왔지만, 적극 타협하고 동거하기도 했다. 이번 쿠데타가 터지고서도 NLD는 쿠데타 이전의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기를 바랐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그 핵심 수단으로 여겼다. NLD가 비폭력 저항을 매우 중시한 것도 이와 연관 있다.

이런 목표와 전략은 운동에 해가 되기도 했는데, NLD가 파업 노동자 생계 지원 조직을 사실상 볼모 삼아 몇몇 부문 노동자들의 방어적 무장을 자제시킨 바람에 그 노동자들이 지금 꼭 필요한 방어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도 했다.

군부 쿠데타를 좌절시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는 대중과 목표가 (그래서

필요로 하는 전략도) 달랐던 것이다.

NLD가 주도해 수립한 임시 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에 맞선 미얀마인 모두를 대표하는 ‘정통’ 정부를 자처하지만, 출범하며 발표한 현장에서 쿠데타의 주범인 미얀마 군 장성 집단 ‘탓마도’ 해체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통합정부는 소수민족들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자신들이 미얀마인 모두를 대표할 만하다고 한다. 그 맥락에서 이들은 4월 16일 발표한 내각 명단에 몇몇 소수민족 출신 인사들을 포함시켰다.(이는 여러 민족이 반군부 투쟁에 동참하는 데서 압력받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인사들은 대개 친NLD 성향의 직업 정치인·지식인들이고, 요직은 대개 버마족 출신자들에게 돌아갔다.

국민통합정부는 수치 정부 시절에 기소된 로힝야족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통합’을 내세울 때 가장 중시한 것은 “국제 사회”, 즉 미국 등 강대국 정부들에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NLD가 임시 정부를 앞세워 운동 안에서 ‘국가’ 구실을 하고, 더 나아가 공식 군대 “연방군”을 창설해(반(反)군부 진영 전체를 대변·수호한다고 자처하며) 무장력을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군부의 탄압을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무장력이 NLD에 독점돼 있으면 NLD와는 전략이 다른 운동이 성장하는 데에 커다란 압력(심지어 성장을 억누르는 힘)이 될 수 있다.

평범한 미얀마인들은 계속 심해지는 탄압에도 영웅적으로 투쟁해 왔다. 잔혹한 군부를 타도할 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 LG윌타워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_____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_____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국가 개입 강화하는 바이든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민주당 고참 정치인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연속성을 상징하는 후보로 여겨졌다. 여기서 “연속성”이란 이전의 클린턴과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클린턴과 오바마는 미국의 국력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바이든 내각은 분명 클린턴·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로 가득하다. 개중에는 오바마가 군사력 사용을 지나치게 꺼렸다고 여기는 때파도 많다. 바이든이 기존 신자유주의·제국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대(對)러시아 제재를 추가한 것이 그 사례다. 하지만 바이든이 클린턴·오바마 정부를 고스란히 본뜨고 있지는 않다.

가장 명백한 사례로 바이든은 9·11 공격 20년이 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반발로 오바마뿐 아니라 트럼프도 가지 못한 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노선 조정은 경제 전략에 있다. 바이든은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차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추가 지출)에 이어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한 논평가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래 40년 만에 “큰 정부 시대는 끝났다”던 시대가 끝났다”고 트위터에 썼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브라이언 디스는 〈뉴욕 타임스〉인터뷰에서 이 같은 노선 조정의 이유로 오바마 취임 이후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꼽았다.

첫째는 기후 변화다. 이는 인프라 정책을 추동하고 있다.

둘째는, 디즈의 말을 빌면 “미국 경제가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흥미로운 것은 클린턴과 오바마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키우는 것에 신경 쓰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여성 좌파 의원들, 이들의 청년 지지자들이 바이든 같은 민주당 주류 정치인에게 가하는 왼쪽의 압력을 반영하는 것일 테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하에서 일어난 미국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한다. “이 계획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이어진 인종적 불의에 대처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청정 인프라 투자의 혜택 40퍼센트를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에게 돌린다.”

경쟁

셋째 변화는, 디즈의 말을 빌면 “중국의 처지가 10년 전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국제적 경쟁자들을 상대하는 미국의 처지도 달라졌다.

“국내 제조업 역량 구축을 목표로 삼고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마음이 … 더 열리고 있다. 미국이 공정한 장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장 기반 해법으로는 시장에 기반을 둔 조건에서 활동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을 상대할 때 미국 경제가 드러낸 큰 약점들을 보완할 수 없다.”

국가 개입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개

조해, 디스가 말한 “떠오르는 세계적 경제·군사 강국”인 중국에 맞서는 것이 바이든의 목표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바이든은 인프라 계획으로 “우리 시대의 중대한 도전, 즉 기후 위기와 독재적인 중국의 야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을 통합하고 결집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유럽연합과 충돌했다. 중요한 쟁점 하나는 유럽연합이 미국 IT 대기업을, 이른바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고 한 것이었다.

오바마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도 FAANG을 옹호했다. FAANG이 미국 자본주의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탈세하기도 한다.

최근 바이든은 21퍼센트의 단일 글로벌 법인세 세율을 도입하는 국제 합의를 제안했다. 이런 합의는 미국 기업의 이윤이 아일랜드공화국 같은 조세 회피처로 누출되는 것을 줄이고, 인프라 정책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정부에 가져다줄 것이다.

또, 디지털세 도입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압력을 완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서구 자본주의를 더 수월하게 결집시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효과가 어느 하나라도 실현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미국 정치권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탐구해 온 경제사가 애덤 투즈는, 바이든의 8개년 인프라 계획이 필요한 파장을 낳기에는 너무 온건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바이든의 야심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51호 / 번역 김준효



바이든의 경제 전략에는 국가 개입으로 미국을 개조해 세계 패권을 지키겠다는 야심이 있다. 3월 11일 “미국 구제 계획” 법안에 서명하는 바이든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플로이드 살해 경찰 유죄 판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성과

4월 20일(미국 현지 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플로이드 살해 사건은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한 계기였다. 다음은 이번 판결에 관해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발표한 성명서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 데릭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전 세계 천대 받는 사람들의 승리다.

이번 판결은 역사적으로 오랜 미국의 현상 유지와 단절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과 자경단의 인종차별적 폭력이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아 왔다. 미국 흑인들은 그런 폭력에 시달려 온 동시에,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영웅적으로 투쟁해 왔다. 엄청난 장애물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외로운 싸움은 아니었다.

이번 판결은 거대한 투쟁으로 현 사법 체계에서 이를 수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짝 맛보게 해줬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지 플로이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몇몇 인종차별적 경찰들은 좀 더 조심스러워하겠지만, 인종 차별이 종식되거나 거리에서 경찰의 탄압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경찰 활동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했다. 조지 플로이드를 잔인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사진 출처: Tony Webster(블라카)

4월 19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유죄 판결 촉구 행진. 거대한 운동이 없었다면 흑인 살해 경찰은 또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살해한 쇼빈—이와 비슷한 인종차별적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허다한 자—이 기소된 죄목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검사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쇼빈이 저지르고 많은 경찰관들이 저질러 온 일은 경찰 자체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그것은 경찰 활동이자 살인이었다.

국가가 쇼빈을 정직시키고, 해임하고, 결국 2급 과실치사, 2급·3급 살인으로 기소해야 했던 것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거리에서 다시 폭발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때문이었다. 운동의 여파가 재판정을 압박한 덕에 세 혐의 모두 유죄라는 당연하지만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이 대중 투

쟁으로 사회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동시에, 승리를 쟁취하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

이 체제도 유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이미 미국 각지에서 약간의 경찰 개혁을 이끌어냈고, 향후 더 많은 개혁과 경찰

예산 삭감을 이루어 내기 위한 부양력을 낳았다. 수년간의 막후 로비로는 이를 수 없었을 것들이다. 하지만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다. 사회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 사회에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본주의 질서를 강요하기 위해서이며, 인종 차별도 그 질서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자원을 재분배하고 경찰을 약화시키는 모든 개혁을 지지한다. 억압적 경찰 기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 구조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다.

이번 재판 담당 검사 스티브 슬레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기소는 경찰에 맞선 기소가 아니라, 경찰을 위한 기소다.” 불행히도 맞는 말이다.

경찰에 맞선 더 거대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거리 운동의 몫이다. 매번의 승리는 인종 간 평등과 사회주의를 쟁취하는 투쟁이 전진할 길을 보여 준다. 이 투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적 본성을 깨닫고 있다. 사람들은 각종 차별·억압과 자본주의적 착취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에 맞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국가와 지배계급이 누구 편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있다. 경찰 기구 자체와, 경찰이 보호하는 체제 전체를 무너뜨릴 힘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번역 김준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 전쟁광들의 쓰라린 패배

4월 14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비극이자 잔혹극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것으로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1년 나토(NATO)가 주도한 침공 이후 최소 17만 5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조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미국은 이미 수년간 전쟁과 점령에 시달려 온 이 나라를 초토화했다.

지금의 철군은 미국, 나토 그리고 영국의 쓰라린 패배다.

현재까지 이 동맹이 이뤄 낸 성과는 수도 카불의 불안정한 폭주각시 정권뿐이며, 수도 바깥은 대부분 탈레반 반군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20년 동안 싸운 끝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영원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철군 결정은 미국의 일부 우파에 충격을 줬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크널은 테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직 완패시키지 못한 적을



미국군에 의해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

두고 퇴각하겠다는 것이며, 미국의 지도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선언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 서방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할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는 중이다. 훨씬 눈에 덜 띄는 방법일 테지만 말이다.

바이든이 인접국인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보안군 전원의 보급을 계속 대는 까닭이기도 하다.

폭격기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 페르시아

만과 인도양을 따라 늘어난 육상 기지,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보낸 장거리 폭격기로 무장 감시 드론이 찾아낸 반군들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2011년 미군 철수 이후의 이라크와 비슷한 궤적을 따라갈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서방의 지원을 받은 허약하고 인기 없는 이라크 정부는 얼마 안 가 아이시스(ISIS)의 부상과 이슬람 국가 운동으로 위기에 처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둘러쌀 주둔군 때문에 이 나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엄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할 때 동원한 미사여구도 미국에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와 영국 노동당 총리 토니 블레어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운운하곤 했다.

서방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입의 진정한 목적은 서방

제국주의의 힘을 과시하고 특히 중동을 위협해 미국의 지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인도주의적”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항상 옆에 있겠다고 가식을 떨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은 늘 그랬듯이 공허한 말을 했다. “유의미한 인도주의·개발 원조를 지속해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연설에서 점령을 끝내는 진정한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탈레반과의 전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당면한 도전에 집중해야 한다. 점점 더 자신만만해지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려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멸적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피를 봐야 했다. 이제 미국은 다음 “악당”을 상대할 준비가 돼 있는 듯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5호 / 번역 김동욱

일감 없다고 휴업하더니 노동강도 높은 르노삼성

이형주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 조합원

르노삼성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강제 휴업,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비사업소 폐쇄 추진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 240여 명이 강제 휴업 중이다. 사측은 처음에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기한으로 272명을 휴업시켰다. 그러면서 노동강도를 대폭 올렸다. 시간당 생산 대수가 45대에서 60대로 늘었다. 휴업을 나간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됐고, 남은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어쩌나 일이 힘든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을 돌며 파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을 때,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의 밀도가 높아 고개를 돌릴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르노삼성에는 독립노조와 금속노조가 있는데, 두 노조는 협력적으로 투쟁을 함께하고 있다.) 결국 일부 계약직 노동자들은 높아진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해 퇴사하기까지 했다.

3월 말에는 사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 접촉자들이 격리에 들어갔다. 사측은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휴업자 일부를 복귀시켰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을 오락가락하게 만든 사측에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사측은 애초에 판매와 생산량이 줄었다며 2교대제를 1교대제로 전환하는 등 부분 휴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현재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신차종(아르카나)의 유럽 수출물량을 제때 공급해야 한다면서 노동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가증스럽게도 적은 비용·인력으로 노동자들의 피땀을 한 방울이라도 더 쥐어짜려고 혈안인 것이다.



4월 15일 르노삼성 부산 공장 내에서 진행된 파업 집회

정비사업소 폐쇄

지금 사측은 창원·인천 정비사업소 폐쇄도 추진하고 있다. 전향배치로 해당 사업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데, 이 노동자들은 4월 26일로 예정된 강제 발령으로 하루아침에 낮은 타지로 근무지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를 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나가라는 얘기다. 사측은 적자 타령하며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왜 위기에 아무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가?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물량 손실과 늘어난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4월 10일 특근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르노삼성차노조(독립노조)는 특근 거부 지침을 내렸다.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 조합원들도 특근을 거부하고 출근 홍보전을 벌였다.

사측은 임금을 3배로 주겠다고 노동자들을 회유했다. 그러나 동료들이 강제 휴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 살자고 특근을 할 수는 없다며, 많은 조합원들이 특근 거부에 동참했다. 결국 사측은 평소 생산량의 겨우 30퍼센트 수준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

4월 15일에는 부산 공장의 조립부서 노동자들이 4시간 파업했다. 이로

인해 전 공장이 멈췄다.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고 공장 안에서 집회를 했다. 사측은 눈치를 보며 라인을 가동할 엄두도 못 냈다.

집회가 끝난 후에야 사측은 생산라인에 사무직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을 모두 투입해 공장을 가동했다. 집회가 지속됐다면 이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4월 21일에는 하루 파업을 했는데, 이 때도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생산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폐쇄가 예정된 정비사업소의 노동자들도 강제 발령에 반대하고 있다. 4월 15일과 16일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창원 정비사업소 노동자들의 대시민 홍보전에 동참했다.

이곳에서는 조합원 16명이 투쟁하고 있었다. 연대 투쟁 속에서 우리는 서로 힘을 받았다. 단결을 강화해 정비사업소 폐쇄를 막아내는 것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데도 유리하다.

지금 사측은 수출 물량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측은 파업과 특근 거부가 있는 날에는 파업 불참자들과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억지로 생산했다. 이들이 원래 하던 일이 아니어서, 1명이 하던 일을 3~4명씩 붙여서 해야 했다.

이럴 때, 파업 수위를 올려 생산에 차질을 준다면 더 효과적으로 회사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법정관리 쌍용차, 부도에 노동자 책임 없다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유병규

4월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법정 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지만,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을 이유로 법정 관리 개시는 미뤄져 왔다. 그러나 매각 협상이 최종 시일을 넘기고 불투명해지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쌍용차의 법정 관리는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으로 법원이 쌍용차의 재무 상태를 심사해 쌍용차를 청산할지, 회생시킬지를 결정한다. 쌍용차의 생사 여부가 법원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2009년 대량 해고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법정 관리하에서 쌍용차에서 3000여 명이 해고된 바 있다. 대량 해고로 노동자와 가족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정부가 수천 명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만만찮은 부담일 수 있다. 더구나 쌍용차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도 이어져 노동자 수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파산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쌍용차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이다. 사실 법정관리

하에서 정부는 쌍용차의 실소유주가 됐지만,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영구 국유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기업에 팔아 넘기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쌍용차를 공개 매각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고통 떠넘기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그래 왔듯이, 자발적 퇴사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 등을 압박하면서 고통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이미 산업은행장이동걸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회생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 보여 주는 바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이런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등은 쌍용차가 '기업 청산이나, 노동자 희생을 통한 기업 회생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노골적인 고통을 주문한다. 노동자들이 일부 해고를 감수하거나 임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임금 삭감과 복지 중단으로 고통을 받아 왔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매각을 전제한 기업 회생이 아니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영구 국유화가 필요하다.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쌍용차를 소유·운영하라는 것이다.

국가 소유가 더 진보적이거나 모종의 사회주의적 초저라고 환상을 가져서 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보호라는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 국유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만이 쌍용차 같은 기업에 거액을 투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 19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왔다. 이런 돈을 기업주들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김승주

4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민성철)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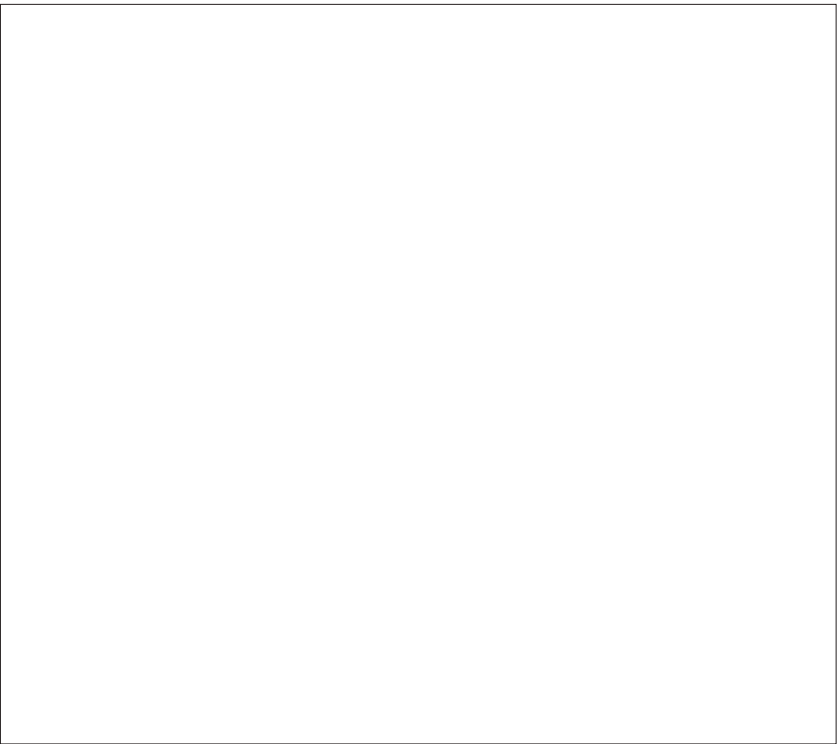
2018년 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강제 집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법원이 오히려 역행해 버렸다. 원고 중 한 명으로 재판장에 직접 출석했던 이용수 할머니(92세)는 중간에 퇴장해 “황당한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3명이 승소한 재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결과를 석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할머니들 손을 들어 줬던 1월 판결 재판부(민사합의 34부)도 정기 인사로 새로 교체된 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에 추심)를 이번(4월) 판결과 같은 논리(국가면제)로 중단시켰다.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논리는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 일본 측이 주장해 온 것이다. 타국의 재판부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재판의 성립 자체를 거부해 왔다.

1월 판결은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불법 행위는 국가면제 적용에서 예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비수 꽂은 판결 한미일 동맹과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

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4월 판결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러나 많은 국제 법률가들이 일본의 국가면제 논리를 반박하며 배상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면제 논리는 결국 사법이 국가 간 정치(외교)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실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판결문에서 드러난다: “[국가면제에서] 새로운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 만약 새로운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고려하여 세밀하게 정해야 할 사항이다.”

3개월의 저울질 끝에 재판부가 선택한 ‘국익’은 결국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이다. 그들의 국익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정의는 없었다. ‘국익’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필요성과 그 동맹에 기대 얻어 온 지정학적 이익, 양국 기업이 수십년 간 얹히고설키면서 생긴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근본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스처 정치만 했을 뿐 위안부 문제 해

결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결정적인 배신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유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고 거듭 못 박았다.

문재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을 공개 비판했다. 3·1절 기념사에서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게 거듭 화해 신호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배신

이런 정부 기초가 이번 위안부 피해 배상 기각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대한민국은 피고[일본]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2015. 12. 28. 한·일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위 합의의 파기를 전제로 피고[일본]의 출연금 반환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4월 21일 판결문)

집권 초 문재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 대책” 마련과 “외교 문제와 과거사 문제 분리 처리”를 약속했다. 심지어 1년 반 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했을 때는 “항일전” 운운하며 불매 운동을 독려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위선이었고, 포퓰리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 문재인은 반일 감정을 정부 지지로 흡수하려 하지만, 거기에 담긴 진정한 염원에 부응할 생각은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하나둘 눈을 감아, 2017년 32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열다섯 분만 남았다. 반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3월 31일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강제 연행을 보여 주는 증거가 없다”고 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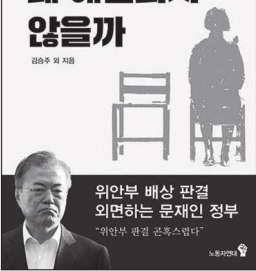
그런데도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을 승계해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정부 비판을 회피하고 있다.

기업주들과 국가 권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또다시 외면한 법원과 문재인 정부는 규탄과 증오를 받아 마땅하다.

추천 소책자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김승주 외 지음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김승주 외 지음, 노동자연대, 128쪽, 4,000원

서평 |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 (김태형, 갈매나무, 292쪽, 16,000원)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장호중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으로 유명한 김태형 심리학자가 새 책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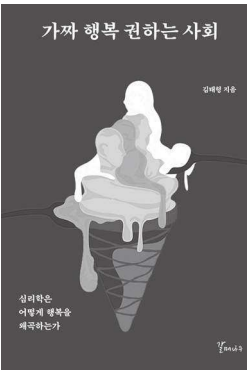
새 책의 제목이 낯익은 독자들은 그가 3년 전에 펴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떠올릴 듯하다. (본지 236호에 실린 서평을 참고하시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는 이 책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이라는 주제가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불행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대변하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본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GDP의 3~4퍼센트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 정신질환과 불행,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극했다.”

그런데 가장 흔한 행복론은 돈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물질주의 행복론’이다.



김태형은 먼저 이런 사실이 현재 한국 사회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에 시달린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는 것은 행복의 증가가 아니라 주로 [이런 심리적] 고통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주류 심리학은 사회, 역사 등에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오직 개인만을 들여다본다.”(99~100쪽)

이렇게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주관주의나 상대주의로 빠지기 쉽다.

예전대 주류 심리학은 “욕망을 포기하라”(금욕주의 행복론)거나 일시적 “쾌감”들로 행복을 대체할 수 있다고(쾌락주의 행복론) 설교한다.

그러나 “욕망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욕망을 버리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줄여주는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 경험도 할 수 없게 만든다.”(69쪽)

주류 심리학 비판

주류 심리학자들은 쾌락주의 행복론을 뒷받침하려고 ‘긍정적인 감정의 빈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는데 김태형은 이런 연구들이 가진 한계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한 생활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또 주류 심리학은 “행복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개인 차에만 관심이 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행복 수준도 낮아지

게 하고 ... 불행한 이들을 탓하게 만든다. ... [그리고] 행복 경쟁을 부추긴다.”(116~118쪽)

그는 행복론을 설파하는 주류 심리학이 “주관 관념론”(행복하다고 생각하라)으로 빠지거나 현실 왜곡과 도피를 조장하고, 사실상 진정한 행복은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저자는 에리히 프롬과 마르크스에게서 그 답을 찾는다.

다만, 저자가 덴마크 같은 사회의 밝은 면만 언급한 것은 다소 일면적으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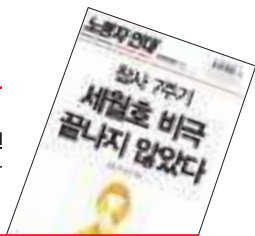
물론 공정하게 말해 그가 복지 자본주의를 최선의 대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 듯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설사 평등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계산적인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사회다.” “나는 국가가 전 국민의 생존을 책임짐으로써 생존 수단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가 복지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는 다소 모호하지만 그

것은 이 책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단순히 지배 수단으로만 여긴 것처럼 설명한 부분도 아쉽다. 저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표현에서 “아편” 뒤에 “(마약)”이라고 설명까지 덧붙였는데, 마르크스는 종교를 단순히 해로운 마약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 아편은 합법적이었고, 타 이레놀처럼 광범하게 사용되는 진통제였지 오늘날의 ‘마약’처럼 여겨지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마르크스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을 속여 신앙을 갖게 만든다고 본 당시 계몽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 종교의 사회적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지 종교를 단순히 경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다른 심리학 저작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짜 행복론과 소확행에 대한 김태형의 비판은 속 시원할 것이고 대안적 삶에 대한 고민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죽음 한 달 잘못 없다는 육군, 차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

성지현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육군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제전역 처분을 고수하고 있다. 유가족이 변 하사가 제기한 복직(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고인 육군참모총장 측은 사죄는 커녕 강제전역 처분이 타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육군은 여전히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라며 강제전역 처분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또, 육군은 “[변 하사가 군대에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군 복무가 부적절하고, 변 하사의 복무가 “한 개인 인권만을 위해 그의 다수 인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궤변에다가 변 하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가려는 회피일 뿐이다.

성전환 수술은 타고난 성과 자신이 인식한 성 사이의 차이로 말미암은 고통을 해소하려 택하는 것이다. 이를 ‘심신장애’로 규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차별일 뿐이다. 또, 육군은 변 하사의 주변

동료들이 성전환을 응원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변 하사는 상부에 성전환 수술에 대해 보고하고 장기 휴가를 받아 여단장의 격려 속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이 점이 군에서 내쳐졌을 때 그가 그토록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낀 이유였을 것이다.

변 하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8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지난 4월 15일)에서도 육군 측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고인의 죽음으로 끝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육군은 유가족이 복직 소송을 승계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냉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결정과 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변 하사가 군대에서 내쳐져 고통받던 동안, 그를 강제 전역시킨 책임자인 당시 육군참모총장 서욱은 국방부장관이 됐다(2020년 9월 취임). 또, 현재 재판의 피고이자 모욕적 태도를 고수하는 현 육군참모총장 남영신은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어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군사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기를” 자신의 성별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다

안보지원사령부는 문재인 정부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고 만든 조직이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육군 참모총장·국방부장관에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이 차별이며 복직을 권고했음에도, 이들은 이를 가뿐히 무시했다.

이처럼 육군뿐 아니라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지금까지도 반성은커녕 해당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성소수자 차별 개선 요구에 냉담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변 하사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 전

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늦었지만 마땅히 고 변 하사와 유가족의 뜻대로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변 하사의 명예를 사후이라도 회복할 수 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군대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임준형

정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체류기간이 끝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동포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넘도록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다가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상담 기관들에는 왜 자신은 체류기간 연장 조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항공편이 줄어 체류기간이 끝나도 출국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자칫 미등록 체류자가 될 수 있는 난처

한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 7만~11만 명이라고 밝힌 것에 비춰 볼 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출국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도 수만 명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해 주고 이마저도 끝나면 출국기한만 유예해 주기를 반복해 왔다. 출국기한이 유예된 기간에는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주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생계 걱정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정부는 농어업에서 계절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체류와 취업을 몇 차례 허용했다. 지난해 8월 처음 시행할 때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 계절근로를 허용했으나, 올해 2월 두 번째 시행할

때는 대상을 방문취업제 동포와 그 가족 등으로 넓히고 기간도 13개월까지 늘렸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열악한 농어업에서 일해야만 비교적 긴 체류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청은 미미했다.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4월 13일 기준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중 계절근로 신청 인원은 37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조치로 체류기간이 1년 연장된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처지의 농어업 계절근로를 할 동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자 4월 19일 정부는 세 번째 계절근로 허용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을 코로나로 출국하지 못해 출국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했다. 또 쿠폰타로 귀국을 원치 않아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가받은 미얀마인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인도적 특별 체류 미얀마

인들에게 보장한 비자(G-1)로는 강제 추방만 안 될 뿐 그 밖의 지원이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단기 순환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막혀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사용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이에 반응해 법을 개정하고 일부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 것처럼 비난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잖이 의존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주노동자 ‘단기 순환’ 기조에 예외가 늘어나는 것은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가 뻤한 상황에서도 출국기한만 유예해 주며 이주노동자들을 곤란에 빠트리고,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장기 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고 단기 순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저임금을 유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이간질해 단결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혹독하게 탄압해 온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도 드러낸다. 사용자들의 요구와 정부의 필요가 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만 두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